



2022.5.2.

국회미래연구원 | 국가미래전략 Insight | 44호

‘국가’와 ‘국민’을 줄여 써야 할 국회



박상훈(거버넌스그룹 연구위원)

문지혜(거버넌스그룹 연구행정원)

황희정(혁신성장그룹 연구행정원)



국회미래연구원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국가미래전략 Insight

2022. 5. 2.

Vol. 44

ISSN 2733-8258

발행일 2022년 5월 2일

발행인 김현곤

발행처 국회미래연구원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222호
Tel 02-786-2190 Fax 02-786-3977

「국가미래전략 Insight」는 국회미래연구원이 정책고객을 대상으로 격주 1회 발행하는 단기 심층연구결과로서, 내부 연구진이 주요 미래이슈를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국가의 미래전략을 제시합니다.

※ 본 보고서의 내용은 국회미래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국가’와 ‘국민’을 줄여 써야 할 국회

거버넌스그룹 연구위원 **박상훈**

거버넌스그룹 연구행정원 **문지혜**

혁신성장그룹 연구행정원 **황희정**

요약

- I. 문제로서의 ‘국가’와 ‘국민’
- II. ‘국가’와 ‘국민’을 과용하는 국회의 문제
- III. 비교의 시각에서 본 ‘국가’와 ‘국민’
- IV. 민주주의에 상응하는 정치 언어에 관하여
- V. 짧은 결론 : 정치 언어의 다원화

참고문헌

• ‘국가’인가 ‘정부’인가, ‘국민’인가 ‘시민’인가

- ‘민주 국가’라는 표현이 나올까 ‘민주 정부’라는 표현이 나올까? ‘민주당 국가’가 맞을까 ‘민주당 정부’가 맞을까? ‘책임 국가’와 ‘책임 정부’, ‘대의 국가’와 ‘대의 정부’ 가운데 어떤 표현이 옳을까?
- ‘민주 시민’ 대신 ‘민주 국민’이라고 하면 어떨까? ‘시민교육’ 대신 ‘국민교육’이라 하고, ‘세계시민’ 대신 ‘세계국민’이라고 해도 될까? ‘시민단체’ 대신 ‘국민단체’, ‘시민운동’ 대신 ‘국민운동’이라고 하면 어떤 느낌일까?

• ‘의회 공론장’과 ‘언론 공론장’

- 2022년 국회 본회의 의원 발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가’라는 표현은 ‘사회’라는 표현보다 세 배 많게 사용되었고, 시민사회나 공동체 등의 표현은 아예 사용되지 않았음. ‘국민’은 ‘시민’이라는 표현의 16배나 많게 사용되었음
- 같은 기간 중앙 일간지 뉴스검색 결과, ‘국가’와 ‘사회’의 사용 빈도는 5 : 4 정도였음. ‘국민’과 ‘시민’의 사용 빈도는 3 : 1 정도였음. ‘공동체’, ‘시민사회’ 등의 표현은 ‘국가’ 대비 5 : 1 정도의 비율로 사용되었음
- 언론 역시 ‘국가’와 ‘국민’을 자주 호명하는 편이지만, 다원 민주주의(pluralist democracy)를 이끌어야 할 국회가 그보다 더 국가주의적이라는 것은 생각할 문제임

• 국회 정치 언어의 퇴행

- 민주주의에서 의회는 사회의 다원적 이해와 요구를 반영해 행정부가 집행할 공공 정책을 입안하는 시민 대표 기구임. 존 로크는 의회를 ‘시민 정부(Civil Government)’의 요체로 정의했고, 장 자크 루소는 시민을 공화정의 주권자로 명명했으며, 그 주권의 ‘심장’은 입법부에 있다고 말한 바 있음
- 제헌의회에서 3대 국회까지는 본회의 발언 의원 수를 기준으로 보면 ‘국민’을 언급하는 비율과 ‘시민’이나 ‘인민’을 언급하는 비율이 57 : 43으로 비슷했음. 1970년대 초 유신 국회 이전까지는 대통령이 아니라 정당을 책임 정부(responsible government)의 기초로 삼는 ‘자유당 정부’, ‘민주당 정부’, ‘공화당 정부’라는 표현이 사용되었음.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 여러분’을 호명하는 의원은 13대 국회 이전까지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없었음
- 민주화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국민’과 ‘국민 여러분’을 앞세우는 언어 사용법이 개선되기보다 고착된 것은 문제임. ‘정당의 정부’를 뜻하는 표현은 실종되고 대통령 이름 뒤에 정부를 붙이는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의 관행이 더 확고하게 자리를 잡은 것도 돌아볼 일이 아닐 수 없음

• 다원주의의 가치에 맞는 정치 언어의 필요성

- 예나 지금이나 우리 국회에서도 대통령제의 모델 국가인 미국 민주주의를 이야기할 때는 ‘미국 시민’이라 칭하고, ‘닉슨 행정부, 공화당 정부’, ‘카터 행정부, 민주당 정부’로 표현해 옴
-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는 집권하면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정부”라고 불리는 정치 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지만, 실현은 되지 않았음. 관행을 쉽게 바꾸기는 어렵겠지만, 국회에서부터 ‘윤석열 행정부’와 ‘국민의힘 정부’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책임 정치의 원리를 진작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
- 아울러 ‘국민 여러분’이라는 호명을 줄이고, 시민과 사회, 공동체 구성원 등 다원주의에 상응하는 표현의 빈도를 늘려가는 것이 바람직하겠음

I. 문제로서의 ‘국가’와 ‘국민’

- 우리 국회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나 개념 가운데 민주주의의 가치에 상응하지 않게 과용된 사례가 있다면, 단연 ‘국가’와 ‘국민’이라 할 수 있음
- 언론과 사회 전체적으로 국가나 국민을 앞세우는 일이 지나치게 일반화되었지만, 국회가 훨씬 더 심함
- 꼭 필요한 곳에서는 국가(state)나 국민(nation)을 사용해야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정부(government)’나 ‘사회(society)’, ‘공동체(communitiy)’, ‘시민(citizen)’, ‘민중(people)’처럼 다른 표현이 더 적합한 경우에는 그에 맞게 쓰는 것이 필요함

II. ‘국가’와 ‘국민’을 과용하는 국회의 문제

[2022년 의회 공론장]

-2022년 1월 11일부터 4월 5일까지 열린 국회 본회의 392회에서 394회까지 의원 발언을 대상으로 주요 용어의 사용 빈도를 조사한 결과, 국민과 시민은 아래와 같이 언급되었음¹

조사 용어	“국민” ²	“시민” ³
언급 빈도	89	6
비율	93.7%	6.3%

-국가와 사회 그리고 공동체나 시민사회, 구성원 등의 용어는 다음의 빈도로 언급되었음

조사 용어	“국민”	“사회”	“공동체”	“시민사회”	“구성원”
언급 빈도	27	9	0	0	0
비율	75%	25%	0%	0%	0%

1 국회의회의록 검색 서비스(<https://likms.assembly.go.kr>) 검색일 2020.04.15. 이하 국회 본회의의 발언 검색은 모두 이에 따름

2 “국민의당”, “국민의힘”을 제외한 숫자임

3 “마산시민” 등 지방의 이름이 같이 사용된 용례는 제외한 숫자임

- 요약하면, ‘국가’라는 표현은 ‘사회’라는 표현보다 세 배 많이 사용되었고, ‘국민’은 ‘시민’이라는 표현의 16배나 많이 사용되었음. 그밖에 ‘시민사회’와 ‘공동체’라는 표현은 없었음. 2022년 4월 5일까지 국회 본회의에서는 어느 의원도 시민사회나 공동체의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뜻임

[2022년 언론 공론장]

- 국내 ‘뉴스빅데이터’ 분석서비스를 제공하는 <빅카인즈>⁴ 에서 11개 중앙일간지 정치/경제/사회/문화/국제/지역/스포츠/IT과학의 8분야 뉴스에서 2022년 1월 1일에서 4월 14일 사이에 다음 용어가 나타난 빈도를 조사한 결과, 국민과 시민의 출현 빈도는 다음과 같음

“국민”	“시민”
35,437	11,866
74.9%	25.1%

- 국가와 사회 그리고 공동체나 시민사회, 구성원 등의 출현 빈도는 다음과 같음

“국가”	“사회”	“공동체”	“시민사회”	“구성원”
28,542	21,366	2,526	469	1,678
52.3%	39.1%	4.6%	0.8%	3.1%

- 요약하면, 2022년 11개 중앙 일간지를 대상으로 한 뉴스검색 결과에서 ‘국민’과 ‘시민’의 사용 빈도는 3 : 1 정도였음. ‘국가’와 ‘사회’의 사용 빈도는 5 : 4 정도였음. ‘공동체’, ‘시민사회’ 등의 표현은 ‘국가’ 대비 5 : 1 정도의 비율로 사용되었음

- 언론 역시 ‘국가’와 ‘국민’을 자주 호명하는 ‘국가주의적 정조’가 강한 편이지만, 다원주의적 변화를 이끌어야 할 국회의 언어 사용법이 언론보다 더 국가주의적인 것은 생각해볼 문제가 아닐 수 없음. 의회정치 미래로 ‘정치 다원화’를 말하면서 그에 역행하는 일원주의적 정치 언어 일색인 현실은 개선될 필요가 있음

4 <https://www.bigkinds.or.kr/> (검색일 2022.04.14)

Ⅲ. 비교의 시각에서 본 ‘국가’와 ‘국민’

[자연스럽지 않은 ‘국민 여러분’]

- 의회 제도를 만든 영국이나 미국의 경우 본회의 의원 발언은 ‘의장(하원의장을 뜻하는 ‘Speaker’나 상원임시의장을 뜻하는 ‘President’ 등)과 ‘동료 의원 여러분’만 호명하는 것이 일반적인 반면, 우리 국회는 ‘국민 여러분’을 덧붙이는 일이 지나치게 많음
- 과거에는 우리 국회에서도 교섭단체 대표 연설⁵에서 ‘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의원 동지 여러분’을 썼어도 ‘국민 여러분’이 사용된 적은 거의 없었음. 13대 국회 이전까지 “국민 여러분!”이 사용한 교섭단체 대표는 1966년 1월 21일의 김종필(공화당), 1967년 1월 21일의 박순천(민중당), 같은 해 1월 23일의 김종필(공화당), 1981년 5월 6일의 류치송(민한당) 뿐이었음. 대개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의장 그리고 의원 동지 여러분!”,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으로 연설을 시작했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빠짐없이 “국민 여러분!”이 들어간 것은 1992년 159회차 본회의부터였음
-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과거에 사용된 ‘연두교서’ 포함) 가운데 가장 먼저 ‘국민 여러분’을 사용한 사람은 누구였을까? 1965년 1월 16일의 박정희 대통령이었음. 그때 처음으로 연설 중간에 “국민 여러분!”을 호명했음. 대통령 시정연설의 시작부터 “친애하는 국회의원 여러분! 국민 여러분!” 형식이 사용된 것은 1967년 1월 17일이었음. 하지만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도 총 20회의 대통령 시정연설 가운데 “국민 여러분!”으로 시작되는 연설은 1회뿐이었고, 중간에 “국민 여러분!”이 사용된 사례도 총 9회뿐이었음. 대통령 시정연설에서 빠짐없이 “국민 여러분!”이 들어간 것은 2000년 215회차 본회의부터였음
- 초기 국회에서는 본회의 발언 의원 수를 기준으로 보면 ‘국민’을 언급하는 의원 비율과 ‘시민’이나 ‘인민’을 언급하는 의원 비율이 57:43으로 비슷했음.

국회 대수	“국민” 발언 의원 수	“시민” 발언 의원 수	“인민” 발언 의원 수
제헌(1948~1950)	247	67	150
2대(1950~1954)	268	102	82
3대(1954~1958)	270	125	56
비율	57.4%	21.5%	21.1%

5 ‘교섭단체대표연설’ 제도가 없었던 1971년 이전의 경우는 ‘대통령연두교서에대한각교섭단체별대표의질문’, ‘대통령연두교서에대한각교섭단체의기조연설’, ‘각 교섭단체의 기조연설’ 등을 포함함

- 초기 국회에서 시민 개념이 사용된 용례들도 흥미로움

대	“시민” 언급 본회의 수	시민 사용 용례
제헌	76번	시민권, 시민, 소시민, 시민층, 시민투표권, 시민대회, 시민층, 시민 대중, 미국의 보통시민, 시민층
2대	135번	시민계급, 공중시민대회, 시민결기대회
3대	212번	시민사회, 일반 시민, 극소시민, 평시민, 외국 시민, 시민 경제, 중소 시민, 일반시민층, 영세시민, 시민병원, 애국시민, 시민관, 시민 생활
4대	38번	시민적, 시민민주주의, 시민적 정치권, 한국 시민, 북한 시민, 남한 시민, 시민의거, 하급시민들
5대	66번	구국시민토론회, 좋은 시민, 일개 시민, 남녀 시민들

- 본회의의 발언 가운데 ‘시민 여러분’이라는 표현이 사용된 사례도 있음

“우리 애국시민 여러분 ...” (1956년 정일형 의원의 본회의 발언 중에서)
 “투표자 시민 여러분 ...” (1957년 김상돈 의원의 본회의 발언 중에서)
 “민권은 승리하였다. ... 애국적인 학생, 시민 여러분! 여러분은 그 위대한 힘을 유감없이 보여주어...” (1960년 4.19 직후 국회부의장의 본회의 발언 중에서)
 “이번 17대 총선에서는 ... 그 어느 때보다 모범적인 선거와 시민의 활발한 참여를 통해서 민의에 의한 국회를 건설해 냈습니다 ... 저는 이것이야말로 시민혁명이라고 이름 붙여도 손색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17대 국회를 ‘국민의 국회’이자 ‘시민의 국회’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해서 적극 나서서 국민주권을 행사하신 위대한 시민 여러분께 축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국회개원식 축사 중에서)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 (2012년 홍문종 의원의 본회의 발언 중에서)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 (2015년 최재천 의원의 본회의 발언 중에서)
 “보통 시민 여러분 ...” (2019년 김재경 의원의 본회의 발언 중에서)
 “존경하는 주권자 시민 여러분 ...” (2021년 민형배 의원의 본회의 발언 중에서)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 (2021년 장혜영 의원의 본회의 발언 중에서)
 “일터에서 일하는 시민 여러분 ...” (2021년 류호정 의원의 본회의 발언 중에서)

- 통상의 번역어 선택도 생각할 점이 많음

- 대통령제를 대표하는 미국의 경우 대통령이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연설할 때도 보통은 ‘나의 동료 (미국) 시민 여러분(My fellow citizens; My fellow Americans)’으로 호명함. 하지만 이런 표현이 우리말로 옮겨질 때는 ‘국민 여러분’으로 바뀌어 버림. 다른 사례의 번역어 선택에서도 국가나 국민이 과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대표적으로 다음 예를 들 수 있음

“고등학교 때 대입 영어시험 예상 문제 지문으로 빠지지 않았던 게 에이브러햄 링컨의 게티즈버그 연설문과 존 F 케네디의 대통령 취임사였다.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는 지상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 ‘국가가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묻지 말고, 국민이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물으라...’

- 위 번역에서 국가와 국민에 해당하는 원문은 ‘state’나 ‘nation’이 아니라 ‘people,’ ‘citizens,’ ‘country,’ ‘government’인바, 다음과 같이 옮기는 것이 더 자연스러움

“민중의, 민중에 의한, 민중을 위한 정부(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는 지상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 “그러니 존경하는 나의 동료 미국 시민 여러분(my fellow Americans)! 당신의 나라(your country)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해 줄 것인가 묻지 말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물으시라. 나의 동료 세계시민 여러분(My fellow citizens of the world), 미국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해 줄 것인가 묻지 말고, 인간의 자유를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함께 할 수 있는가를 물으시라.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미국의 시민(citizens of America)이든 세계의 시민(citizens of the world)이든, 우리(we)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요구했던 똑같은 수준의 높은 힘과 희생을 우리(us)에게 요구하시라.”

[우리 헌법의 정치 언어]

- 국가나 국민을 애용하는 정치 언어 사용법은 우리 헌법에서 발원하는 측면이 큼. 우리 헌법에는 국가와 국민이라는 표현이 각각 73회와 69회 등장함. “제3장. 국회”에 이은 “제4장. 정부”에서는 행정부와 정부를 동일시하는 표현이 많으며, 대통령을 행정권의 책임자가 아니라 국가와 정부의 수반으로 규정해 놓은 것도 문제임. 이 모든 것은 제헌헌법 제정 당시 직면했던 반공-분단국가의 규범성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음. 1948년 6월 30일 헌법안 1독회에서 조봉암 의원의 다음과 같은 지적은 의미가 있음

“특징적으로 주목을 끄는 것은 ... 인민을 일률적으로 「국민」이라는 어구로 표시된 점입니다. ...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발한다.」하여 세계 공통의 「인민」이라는 말을 기피했습니다. 지금 세계의 많은 나라 헌법에서는 모두 인민이라 합니다. 미국에서도 「피-플」이라 표시했고 「넛슌」이라고 아니하며, 불국에서도 「피-피」라 하며 소련에서도 「나르드」라 해서 모두 인민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공산당 측에서 인민이란 문구를 잘 쓴다고 해서 일부러 인민이란 정당히 써야 될 문구를 쓰기를 기피하는 것은 대단히 섭섭한 일입니다.”⁶

- 제헌헌법을 기초한 유진오 전문위원이 회고록을 통해 ‘국민’ 일색의 헌법이 된 것을 아쉬워하는 다음의 표현도 사시하는 바가 큼

“‘국민’은 ... 국가우월의 냄새를 풍기어, 국가라 할지라도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자유와 권리의 주체로서의 사람을 표현하기에는 반드시 적절하지 못하다.”⁷

6 국회의회의록 검색 서비스(<https://likms.assembly.go.kr>) 검색일 2020.04.15.

7 유진오(1980), 65쪽 (김성보, 2009, 144쪽에서 재인용)

- 적법하게 제정된 헌법의 정치 언어를 부정할 수는 없음. 다만 헌법을 존중하면서도, 사회의 변화와 민주주의의 가치에 맞게 용어와 개념의 개선은 있어야 함. 우리 헌법에는 ‘근로(者)’라는 표현만 있지만, 그간 국회에서 노동(者)라는 표현은 자연스럽게 늘어왔음. 헌법의 영토조항(제3조)에 따르면 북한과의 정상회담은 헌법을 위배하는 일이겠지만, 실제로는 평화를 위한 대통령의 정치 행위로서 모두에 의해 받아들여졌음. 헌법은 자주 바꿀 수 없는 ‘오래된 규범’이고 기본적으로 시대에 뒤쳐질 수밖에 없는 ‘낡은 공문서’이지만, 이를 활력 있게 만드는 것은 시민의 적법한 대표기구인 의회의 능동적인 역할임. 헌법을 바꾸지 않더라도 정치인들의 말과 행위를 통해 사회변화에 따른 새로운 규범을 실천하는 것은 그래서 중요함
- 비민주주의 체제에서는 국가를 신성화하고 국가 안보와 국가 이익, 국민의 의무 등을 강조함. 시민 주권을 부정하면서 그로 인한 정당성의 결핍을 외부로부터의 국가 안보 위협으로 채우려는 것은 민주주의를 늘 위협해 왔음. 민주화 이후 35년을 지나고 있음에도 여전히 <국가보안법>을 고수하고 반공을 ‘국시(國是)’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민주주의 정부’라는 표현을 잘 쓰지 않음. 대신 반공 국가라는 의미를 담아 꼭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표현함. 하지만 국가나 국민이 과용되는 것과 자유주의는 양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생각해야 함
- 물론 민주주의에 덜 친화적이라고 해서 국민이나 국가라는 용어를 배격할 수는 없음. ‘국가’라는 호명에는 조국이나 나라(country/land)의 의미도 담겨 있고, ‘국민’이라는 호명에는 민중이나 인민을 뜻하는 ‘people’의 의미가 포괄되어 있기도 함.⁸ ‘국가 관료제’나 ‘국가기구’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때도 많고, ‘복지국가’의 경우에서 보듯이, 비록 그 기원은 독일 비스마르크 시대의 ‘사회국가’(Sozial Staat)의 영어 번역어로 만들어졌지만, 이를 ‘복지정부’로 대체하면 어색할 것임. 따라서 가능하다면 국가라는 표현을 절제하고 정부라는 용어로 대체해 사용하거나, 국가라는 개념을 쓰더라도 ‘사회로부터 유리된 강권력이나, 맹목적 애국심을 강요하는 윤리적 존재’로 정의하기보다는 민주적으로 통제 가능한 시민의 도구로 이해되어야 할 것임

[참고 1] 일본에서의 국민 논쟁⁹

- 근대 일본에서 ‘국민’이란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사람은 후쿠자와 유키치(福沢諭吉)로 알려져 있음. 그는 메이지유신 이후 민족국가를 수립하며 공동체를 통합할 필요성 때문에 애국심과 민족성의 공유를 토대로 ‘국민’ 개념을 창안함¹⁰
- 패전 후 일본은 1946년 신헌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연합국총사령부>로부터 반론에 직면한 적이 있음. <연합국총사령부> 측은 “the people’을 ‘국민’으로 번역하는 것은 주권재민의 민주주의의 근본을 흔드는 것이 된다. 국민에 대응하는 영어는 nation인데 nation과 people의 의미는

8 nation 개념이 적극적인 의미의 '민족'과 소극적인 의미의 '국민'으로 분화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박명규(2009)와 윤해동(2010) 참조할 것
 9 이하 내용은 정혜윤 박사와 일본 도쿄대 대학원 재학 중인 김진엽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음을 밝혀 둠
 10 박양신(2008), 235-265쪽

다르다.”라고 지적함. 그러나 당시 일본 측은 헌법에서 천황의 지위와 주권재민이 대립할 가능성을 두려워해 ‘국민’ 개념을 고수함. 이에 당시 민정국 소속 토마스 비슨(Thomas A. Bisson)은 결국 “주권의 소재가 불행한 타협으로 끝나 버렸다.”고 논평함¹¹

- 1990년대 이후 일본 지식사회 안에서도 국민 개념이 “보통의 언어처럼 무비판적으로 사용”되는 것에 문제 제기가 계속되어 옴. 특히 오랫동안 일본에 정주하게 된 재일동포를 포함, 외국인 거주자들이 ‘국민’에 포괄될 수 없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음¹²

[참고 2] 독일 의사당 건물 개보수 당시의 흥미로운 논쟁¹³

- 지금의 독일 의사당은 건물 지붕이 투명한 유리로 되어 있음. 관광객을 포함해 누구나 그 위에 올라가 의사당 내부를 볼 수 있음.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건축학적으로 구현해 낸 것으로 유명한
- 애초 이 건물은 제정 시기에 건축되었고, 나치에 의해 크게 파손되었다가 20세기 후반 독일이 통일된 이후 리노베이션을 하게 되었음. 그때 ‘국민’ 개념을 둘러싸고 독일 의회 내에서 대대적인 논쟁이 전개되었음. 핵심은 건물 정면에 새겨진 ‘Dem Deutschen Volke(독일 국민에게)’라는 표현에서 비롯되었음. 리노베이션을 맡은 건축가 한스 하케(Hans Haacke)는 그것이 국가주의나 혈연 공동체의 의미가 강하다며 ‘Der Bevölkerung(영어의 population에 가까움), 즉 독일 민족만이 아닌 독일 내 거주하는 모든 사람을 뜻하는 표현을 의사당의 북쪽 중정 바닥에 설치해 모두가 볼 수 있게 하자는 제안을 했고, 매우 근소한 표 차로 의원들의 동의를 얻음
- 지금 독일 국회의사당 건물 밖 정면에는 전과 마찬가지로 ‘Dem Deutschen Volke(독일 국민에게)’가 있고, 의사당 안에는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는 위치에 흰색 네온으로 빛나는 ‘Der Bevölkerung(독일에 거주하는 모든 이들에게)’이 있음

[다원주의의 보루어야 할 의회]

- 의회는 시민사회의 다원적 이해와 요구를 반영해 행정부가 집행할 공공 정책을 입안하는 시민 대표 기구임
- 존 로크는 자신의 대표작인 『시민 정부(Civil Government)』에서 의회를 시민의 의사를 집약하는 기구로 정당화했음.¹⁴ 『사회계약론』을 통해 장 자크 루소는 신민(sujets; subjects)과 대비해서 시민(citoyens; citizens)을 공화정의 주권자를 가리키는 명칭으로 사용하면서, 공화정의 주권은 입법부에 그 ‘심장’이 있다고 강조한 바 있음¹⁵

11 岡本仁宏(2008), pp. 11-48.

12 岡本仁宏, 위의 글, p. 32

13 관련된 설명은 <https://derbevoelkerung.de/> 참조. 2000년 12월 9일 자 슈피겔지(誌) 온라인판에 실린 건축가 한스 하케의 인터뷰 기사("Der Reichstag ist ein imperialer Palast; 지금 의사당은 제국 궁전이다"도 참조할 수 있음. 이 부분은 베를린에 거주하면서 독일 정치에 관한 글을 연재 중인 정순영의 도움을 받았음을 밝혀 둠

14 기존에 『통치론』으로 번역되었던 이 책의 원제("시민 정부의 참된 기원, 범위, 및 그 목적에 관한 하나의 시론")가 갖는 중요성에 대해서는 박상훈(2020) 참조할 것

15 장 자크 루소(2018) 110쪽

- 대한민국 국회도 1970년대 초 유신 국회 이전까지는 대통령이 아니라 정당을 책임 정부의 기초로 삼는 ‘자유당 정부(1공화국), ‘민주당 정부(2공화국), ‘공화당 정부(3공화국)’라는 표현이 사용되었음.¹⁶ 그 뒤 유신체제를 거쳐 5공화국에서 ‘정당의 정부’를 뜻하는 표현은 실종되었고 민주화 이후 국회에서도 복원되지 못했음. 오히려 대통령 이름 뒤에 정부를 붙이는 ‘노태우 정부’,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의 관행이 더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음
- 우리 국회의 이중성
 - 예나 지금이나 우리 국회에서도 미국의 주권자를 가리킬 때는 ‘미국 시민’이라고 표현함. 미국 정치를 언급할 때도 ‘닉슨 행정부, 공화당 정부’, ‘카터 행정부, 민주당 정부’, ‘트럼프 행정부, 공화당 정부’, ‘바이든 행정부, 민주당 정부’라고 표현함
 - 하지만 우리 정치와 우리 민주주의를 말할 때는 정부와 시민에 대한 표현에 지나치게 인색하고, 대신 국가와 국민이라는 표현을 과도하게 사용함

IV. 민주주의에 상응하는 정치 언어 사용에 관하여

[민주주의는 정부와 시민이라는 개념에 상응하는 정치체제]

- ‘민주 시민’ 대신 ‘민주 국민’이라고 하면 이상할 것임. ‘민주 국가’보다는 ‘민주 정부’라는 표현이 잘 호응함
- ‘책임 국가’보다 ‘책임 정부’가, ‘대의 국가’보다 ‘대의 정부’가, ‘국민의힘 국가’보다 ‘국민의힘 정부’라는 표현이 자연스러움
- 자주 국가, 독립 국가, 주권국가라고 쓰듯이 국가 역시 꼭 있어야 할 정치 용어이지만, 민주주의와 관련된 진술에서는 절제할 필요가 있음

[국가 vs 정부]

- 우리의 정치 문화에서는 정부와 국가가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되지만, 두 개념은 다름. 정부나 통치를 뜻하는 ‘government’는 ‘배를 이끈다(steer)’는 그리스어에 그 어원을 두고 있음. 옛 그리스에서 폴리스(정치 공동체)는 배로 비유되었는바, 애초부터 government(정부나 통치)란 시민이 공동체를 이끄는 일을 가리키는 용어였음. 당시 철학자들은 폴리스의 통치체제가 좋아야 시민 개개인이 좋은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런 뜻에서 ‘좋은 폴리스(good polis)가 좋은 데모스(good demos)를 만든다.’는 정치관을 세웠음. 그 전통을 따라 오늘날에도 우리는 다양한 정부 정책을 통해 시민의 삶을

16 본회의 의원 발언 가운데 ‘자유당 정부’는 22회, ‘민주당 정부’ 5회, ‘공화당 정부’는 19회 언급되었음

좀 더 자유롭고 평등하고 안전하고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들고자 노력함. 어떻게 보든 정부/통치라는 government 개념은 민주주의의 기원과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음¹⁷

- 국가를 뜻하는 state는 라틴어 ‘status’에서 유래한 말로 애초에는 ‘지위’나 ‘상태’를 뜻하는 비정치적 용어였음. 그뒤 ‘신분’과 ‘통치권’을 뜻하는 의미를 거쳐, 16세기에 들어와 ‘배타적인 영향력의 범위를 가리키는 통치의 단위’라는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함. 결정적인 전환점은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그 후 국가는 점차 ‘영토, 국민, 주권’의 세 요소를 가진 국제법적 주체로 발전하기 시작했음. 동시에 국내적으로는 최고 통치자조차 ‘국가 앞에서’ 애국과 충성의 맹세를 해야 하는 윤리적 실체로 격상되었음¹⁸
- 국가에는 누구도 대들 수 없음.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임. 정부가 시민의 자유에 관계된 개념이었다면, 국가는 그 출발과 발전 과정에서 영토와 주권을 지키기 위해 사회구성원들이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하는 ‘자기 보호의 집단적 보루’를 의미했음. 국가와 짝을 이루는 주권자는 국민(nation)이라 하고 그들의 정체성은 법률적 근거를 가진 국적(nationality)이 기준이 됨. 국가는 국민에게 충성을 요구할 수 있고, 국가에 반하면 ‘간첩죄’나 ‘내란죄’를 적용할 수 있음. 정부에 대한 권리와 의무는 그와는 다름. 정부와 짝을 이루는 주권자는 시민이라 하고, 그들이 가진 권리는 시민권(civil rights)이라 하며, 민주주의에서 정부에 대해 시민은 자유롭게 반대 활동을 할 수 있음
- 국가와 정부라는 두 용어를 바꿔 적용하면 안 될 때가 있음. 특히 반(反)정부와 반(反)국가는 바꿔 쓸 수 없는 큰 차이가 있음. 과거 권위주의 시절의 학생운동은 합법적으로 선출되지 않은 군부 정권에 저항하는 ‘반정부’ 행위를 했음. 하지만 군부 정권은 이들을 ‘반국가’ 행위자로 몰아갔고 가혹하게 처벌했음.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국민의 의지는 국가를 통해 구현된다는 논리를 강요하는 게 권위주의임. 민주주의가 되면 달라짐. 합법적으로 선출된 정부라도 반대하고 비판하는 일은 시민의 자유이자 권리임. 민주주의를 하면서 정부가 자신에게 충성하는 시민에게만 자유와 권리를 허용한다면 이를 반대하는 시민과의 내전(civil war)은 피할 수 없음
- 정당과의 관계에서도 국가나 정부냐의 문제는 흥미로움. 민주주의는 ‘정당이 정부가 되는’ 정당 정부(party government)를 뜻함. 전체주의 체제는 대개 정당과 국가가 일체화된 ‘당-국가 체제’(party state)로 불림. 권위주의 체제 역시 국가가 정당을 만들고 이끄는 사례가 많음. 우리의 경우 제1공화국 시기의 자유당, 제3, 4공화국 시기의 공화당, 제5공화국 시기의 민정당은 모두 국가권력을 장악한 다음에 그 주도 세력에 의해 위로부터 사후에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일종의 ‘국가 정당’ 혹은 ‘국가 파생 정당’이라고 부를 만함. 그 때문에 우리나라 보수정당은 ‘신한국당’

¹⁷ 민주주의는 ‘국가론’이 아니라 ‘정부론’의 발전을 필요로 하며, 그에 맞는 정치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논의에 대해서는 박상훈(2018) 113-129쪽을 참조할 것

¹⁸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는 이런 국가의 특성을 가리켜 “특정한 영토 내에서 정당한 물리적 폭력을 독점한 조직체”로 정의한 바 있음. 국가는 모든 인격체, 예컨대 피통치자는 물론 통치자 모두로부터 지배의 수단을 박탈한 다음, 통치-피통치자 모두에게 충성을 맹세케 함으로써, 지배의 정당성을 독점하게 되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막스 베버(2021), 1장을 참조할 것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처럼 국가와 자신을 일치시키는 명칭을 관성적으로 사용할 때가 많았음. ‘독일당’, ‘미국당’, ‘일본당’이라는 이름이 해당 나라에서 쓰인다면 그 느낌이 어색하듯이, 우리 정당들도 국가와 자신을 일치시키려는 옛 관행에서 벗어나는 게 필요함

[국민 vs 시민]

- 민주주의에서라면 국민교육이라는 표현보다 시민교육이나 정치교육이라는 표현이 나옴. 권위주의 때라면 정부가 민주적인 규범에 따르지 않았던 시절이기 때문에 시민교육이라는 말은 사용되지 않았음. 적법한 정부가 없다면 자유 시민은 없음. 대신 군부정권은 자신들은 국가 안보를 위한 존재이며, 그에 맞는 국민교육을 한다고 정의했음
- 시민단체가 괜찮을까 아니면 국민단체가 괜찮을까. 국민단체는 하나밖에 있을 수 없음. 국가가 유일한 국민단체임. 그러나 시민단체는 언제나 다수로 존재함. 시민단체는 자유 시민의 삶의 다양성을 반영하기 때문임. 환자의 권익을 지원하는 시민단체도 있을 수 있고, 환경문제도, 여성단체도, 법률지원 단체도 있을 수 있음
- 민주주의는 국민권이 아니라 시민권에 상응하는 개념임. 국민권은 국적에 해당하는 개념이자 배타적인 권리를 말함. 시민권은 다름. 국적의 경계를 넘어서도 기본적인 인권을 포함해 시민권을 인정해 줄 수 있고, 세계국민이라는 표현은 못 써도 세계시민은 얼마든지 쓸 수 있음
- 시민권은 필요하면 확장할 수 있고, 새로운 권리를 추가할 수 있으며, 새롭게 해석함으로써 사회변화에 부응할 수 있음. 국민권과 달리 시민권은 기본적으로 ‘복수의 의미’를 가짐. 오늘날 시민권의 목록 안에는 정부조차 침해할 수 없는 개인의 권리를 가리키는 ‘자유권’도 있고, 평등한 참정권을 포함해 ‘정치권’도 있으며, 정부에 사회경제적 분배 책임을 요구할 권리를 가리키는 ‘사회권’도 있음. 여기에 그치지 않음. 양심적 병역 거부는 물론, 성 소수자처럼 다양한 정체성에 대해서도 시민권을 확대 적용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 새로운 시민권은 또 등장할 것임
- 시민사회라는 말은 민주주의에서라면 자연스러움. 그러나 국민사회라는 표현은 쓰지 않음. 국제적 시민사회는 가능해도 국제적 국민사회라는 표현은 어색함. 국가 간 관계를 말할 때는 국민이라는 표현을 써야겠지만, 우리 안에서 사회구성원의 권리를 이야기하거나 정부의 책임성을 말할 때는 시민이라고 해야 함. 외교 관계에서는 ‘국가의 공식행사’라고 표현해야 하겠지만 일반 시민과의 관계에서는 ‘정부의 공식행사’라고 해야 함. 국가와 국민에 상응하는 자리에서라면 애국가를 불러야겠지만, 시민과 민주화 관련 기념행사를 할 때는 <님을 위한 행진곡>을 불러도 상관없는 것이 민주주의임

V. 짧은 결론 : 정치 언어의 다원화

['정당의 정부']

-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는 '정당 책임 정치론'을 공약하며 "문재인 정부 대신 더불어민주당 정부"라고 불리는 정치를 하겠다고 약속했고, 최근 윤석열 차기 대통령도 "윤석열의 행정부만이 아니라 국민의힘이라는 여당의 정부"를 말한 바 있음

“정당 책임정치라는 것을 제가 내놨다. 정당과 대통령의 관계 정립이 제대로 안 됐던 것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 원인도 된 것이다. 정당 책임정치는 우선은 선거 과정에서도 정당 중심의 선거를 치르고, 정권 교체 이후에 정당이 그 정권의 운영에 대해 함께 책임지는 것이다. 그래서 정당이 생산하는 중요한 정책을 정부가 받아서 집행하고 인사에 관해서도 당으로부터 추천받거나 당과 협의해 결정하는, 그렇게 해서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정부, 잘했으면 국민들로부터 또 선택받고 잘못하면 교체되고 하는, 이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저는 이미 이렇게 공약을 했다.”(문재인 후보, 2017년 1월 9일자 <경향신문> 인터뷰 중에서)

“이제 정부를 인수하게 되면 윤석열의 행정부만이 아니라 국민의힘이라는 여당의 정부가 된다 ... 당정이 긴밀히 협의해서 정책을 수립·집행하고 피드백 해나가야 한다.”(윤석열 당선인, 2022년 3월 10일 국민의힘 선대본 해단식 발언에서)

- 기존 관행을 한 번에 바꾸기는 어렵겠지만, 향후 국회에서부터 '윤석열 행정부'와 '국민의힘 정부'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책임 정치의 원리를 진작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 그간 대통령에 대한 헌법 조문에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애초 <제헌헌법>에서 사용했던 “대통령은 행정권의 수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제51조)”가 그래도 민주주의 원리에 가장 잘 부합한다고 할 수 있음
- 아울러 '국민 여러분'이라는 호명을 줄이고, 시민과 사회, 공동체 구성원 등 다원주의에 상응하는 표현 빈도를 늘이는 것이 바람직하겠음

['대통령의 행정부']

- 대통령 개인의 이름 뒤에 정부를 붙이는 관행의 개선도 필요함. 기본적으로 대통령선거는 행정부 수반을 뽑는 시민 총회로 이해되어야 함. 선출된 대통령이 입법부를 교체할 수 있는 게 아님. 그렇지 않고 대통령선거를 거의 국가를 교체하는 것과 같이 이해한다면, 입헌주의와 삼권분립을 기초로 작동하는 민주주의는 안정될 수 없음
- 대통령 중심의 권력 정치적 언어도 절제할 필요가 있음. 우리 국회에서도 대통령을 가리켜 'VIP'라 하고 대통령비서실 대신 'BH'(Blue House)라며, 마치 은어처럼 부르는 것을 보게 됨. 권력은 숨겨질수록

민주주의를 위협하게 된다는 생각을 해야 함. 가급적 <정부조직법> 상의 공식 명칭을 정확히 사용하고 그에 따른 책임과 권한을 상호 존중하는 정치 언어가 자리 잡아야 하겠음

- 대통령은 왕도 군주도 아닌 선출직 시민 대표임. 국왕이 없는 공화정에서는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 지도자 역할을 하지만, 시민과 마주하는 국내적 상황에서는 어디까지나 정치 지도자이고 집권당의 정치적 책임자임. 이 기초 위에서 국내적으로는 행정 수반이자 대외적으로는 국민대표로서 균형 있는 역할과 호칭이 자리를 잡아야 함. 그렇지 않고 대통령을 국가 혹은 국민과 일체화시키거나, 정당과 의회로부터 멀어져야 하는 특별한 존재로 호명되면 대통령은 책임 정치를 실천할 수 없게 됨

['국가' 대신 '정부'나 '사회']

- 국민은 국가와 짝을 이루는 개념이고, 시민은 정부와 짝을 이루는 개념임. 민주주의는 주권을 가진 시민이 동료 시민 가운데서 일정 임기 동안 정부를 운영할 책임자를 임명하는 체제임
- 그런 의미에서 의원이나 대통령이 시민을 국민이라 호명하는 것은 자신들이 곧 국가이거나 통치자이고 시민은 보호를 받아야 하는 피통치자로 여기는 것과 다르지 않은 일이 됨. 가능한 국가 대신 정부를 사용해도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정부라는 표현을 의식적으로 늘려가는 것이 필요함
- 국가 대신 사회나 공동체 등 다른 표현이 가능한 곳에서도 마찬가지임. 그런 의미에서 <2022년 국회의장 신년사>에서 '성장국가'가 아닌 '성숙사회'가 언급된 것은 가치가 있음. 대통령과 행정부가 '포용적 성장국가'나 '혁신 성장국가'를 주창한 것과 대비해 '국가'가 아닌 '사회', '성장'이 아닌 '성숙'을 말했기 때문임. 더 높은 선진국 순위를 지향하는 성장 만능의 국가관에서 벗어나, 다원적인 삶의 가치에 주목하고 좀 더 성숙한 공동체로의 변화를 지향하는 것이야말로 의회정치의 소명에 부합하는 일임

['국민' 대신 '시민']

- 민주정치는 시민사회와 짝을 이루는 개념이고 책임 정부를 통해 구현되는 공적 활동을 가리킴
- 불가피하게 국가라는 용어를 쓰더라도 정부에 가까운 의미로 사용해야 하고, 국민 대신에 시민이라는 표현이 어울리는 곳에서는 적극적으로 바뀌어서 사용해야 함. 민주주의에서라면 정부는 '시민에 의해' 선출되고, '시민을 위해' 일해야 할 의무를 갖는, '시민의' 것이기 때문임
- 아울러 국정교과서, 국정과제, 국정 담론 등 국(國) 자를 붙이는 관행도 줄여야 할 것임

[언어의 다원주의 없이 정치의 다원주의 없다]

- 문제의 핵심은 ‘국민’과 ‘국가’ 일색의 정치 언어를 개선하는 데 있지, ‘국가’나 ‘국민’이라는 표현을 없애자는 데 있지 않음
- 자연스럽게 정부나 사회, 공동체, 시민사회, 사회구성원, 시민 등 다원적 가치를 담은 정치 언어가 늘어나고, 서로 공존하면서 우리 사회의 여러 목소리가 의회정치를 통해 표출될 수 있는 언어 환경이 중요함
- 말이 다원화되어야 실제 정치도 다원화의 전망을 가질 수 있음

참고문헌

- 김성보, 2009, “남북국가 수립기 인민과 국민 개념의 분화”, 『한국사연구』 제14권
- 막스 베버 지음, 박상훈 옮김, 2021, 『소명으로서의 정치(개정판)』, 후마니타스
- 박명규, 2009, 『국민 인민 시민: 개념사로 본 한국의 정치주체』, 소화
- 박양신, 2008, “근대 일본에서의 ‘국민’ ‘민족’ 개념의 형성과 전개 : nation 개념의 수용사”, 『東洋史學研究』
- 박상훈, 2018, 『청와대 정부』 후마니타스
- 박상훈, 2020, “존 로크의 시민 정부”, 국회미래연구원, 「시민생각」, 6월 18일 자
- 유진오, 1980, 『헌법기초회고록』, 일조각
- 윤해동, 2010, “정치 주체 개념의 분리와 통합 - 박명규, 박찬승의 개념사연구”, 『개념과 소통』 6호
- 장 자크 루소 지음, 김영욱 옮김, 2018, 『사회계약론』, 후마니타스
- 岡本仁宏, 2008, 「国民」を疑う 『年報政治学』 62(1)

국가미래전략 Insight 발간현황

vol	제목	작성자	발행일
1	2050년 대한민국 미래예측과 국회가 주목한 11대 국가 개혁과제	김유빈(연구지원실장)	2020.8.20.
2	2050년 서른살, 민서가 바라는 미래	박성원(혁신성장 그룹장)	2020.9.3.
3	2050 대한민국 미래와 정책의제	김홍범(국회미래연구원 전 연구위원)	2020.9.17.
4	더 많은 입법이 우리 국회의 미래가 될 수 있을까	박상훈(거버넌스 그룹장)	2020.10.15.
5	고령화 대응 국가전략을 만드는 새로운 방법	김현곤(국회미래연구원장)	2020.11.12.
6	보존분배사회 전환을 위한 국민의 선택	박성원(혁신성장 그룹장) 정영훈(국회미래연구원 전 연구위원)	2020.11.19.
7	기후변화 영향 대응현황 및 제언 (국내 연구·정책에 대한 양적 비교를 중심으로)	김은아(삶의질그룹 부연구위원)	2020.11.26.
8	디지털 전환에 따른 한국 경제사회 파급효과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여영준(혁신성장그룹 부연구위원)	2020.12.10.
9	세계적 감염병 이후 사회 변화	박성원(혁신성장 그룹장) 김유빈(연구지원실장)	2020.12.24.
10	한국인의 미래 가치관 조사	민보경(삶의질 그룹장)	2021.1.7.
11	심리자본과 사회자본 확충을 위한 진단 및 교육정책 과제	성문주(혁신성장그룹 부연구위원)	2021.1.21.
12	코로나19와 함께 한 1년: 국민의 삶은 어떻게 변했는가?	허종호(삶의질그룹 부연구위원)	2021.2.18.
13	동북아 지역의 국제 갈등 양상과 무역분쟁: GDELT를 중심으로	박성준(거버넌스그룹 부연구위원)	2021.3.4.
14	국내외 에너지전환정책 현황 및 시사점	정훈(혁신성장그룹 연구위원)	2021.3.18.
15	미래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계획의 도전과제와 혁신방안: 과학기술 부문을 중심으로	여영준(혁신성장그룹 부연구위원)	2021.4.1.
16	국가장기발전전략 탐색에 따른 개혁의제 제언	이선화(거버넌스그룹 연구위원)	2021.4.15.
17	행복조사의 필요성과 한국인의 행복 실태	허종호(삶의질그룹 부연구위원)	2021.4.29.
18	일하는 국회의로의 전환을 위한 제도적 조건	조인영(혁신성장그룹 부연구위원)	2021.5.13.
19	인구감소시대의 보육·유아교육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방향 탐색	이채정(삶의질그룹 부연구위원)	2021.5.27.
20	새로운 국가발전모델의 제안	김현곤(국회미래연구원장)	2021.6.10.
21	선호미래로 향하는 우회도로	박성원(혁신성장그룹장)	2021.6.24.
22	높은 자살률,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문제가 아닌가 : 국민통합의 관점에서 본 한국의 자살률	박상훈(거버넌스 그룹장) 외	2021.7.8.
23	대량 문헌탐색 기반 이머징 이슈 도출 :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분석 사례	김유빈(연구지원실장)	2021.7.22.
24	재난을 넘어, 혁신을 넘어: 미래를 위한 혁신 정책의 대전환	전준(혁신성장그룹 부연구위원)	2021.8.5.
25	어디 사는지에 따라 행복감이 달라질까? 도시와 비도시 지역의 행복요인	민보경(삶의 질 그룹장)	2021.8.19.
26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전직지원서비스 정책 주요 이슈와 제언	성문주(혁신성장그룹 부연구위원)	2021.9.3.
27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 도입에 따른 국내 산업계 영향과 대응방안	여영준(혁신성장그룹 부연구위원) 조해인(삶의질그룹 부연구위원) 정훈(혁신성장그룹 연구위원)	2021.9.16.
28	국회의원 보좌진들이 바라보는 미래 정책과 국회	박현석(거버넌스 그룹장)	2021.10.7.
29	디지털화폐의 등장과 금융시스템의 변화 전망	박성준(거버넌스그룹 부연구위원)	2021.10.21.
30	에너지수요관리 중장기 발전 방향 제시	조해인(삶의질그룹 부연구위원)	2021.11.4.

vol	제목	작성자	발행일
31	복지재정 효율화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복지사업 분담체계 개편 전략	이선화(거버넌스그룹 연구위원)	2021.11.18.
32	청년층의 기업가정신 향상을 위한 대학교육 방향 탐색	성문주(혁신성장그룹 부연구위원)	2021.12.9.
33	저출생·고령사회 심화에 따른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방향 검토 : 아동 및 노인 대상 주요 사회서비스 시설의 분포 분석을 중심으로	이채정(삶의질그룹 부연구위원)	2021.12.16.
34	인구충격에 대응하는 지역의 미래 전략 : 완화와 적응	민보경(국회미래연구원 삶의질그룹장)	2021.12.23.
35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 대응 산업지원 정책과제와 정책효과 분석	정훈(혁신성장그룹 연구위원) 여영준(혁신성장그룹 부연구위원)	2021.12.30.
36	미래비전 2037 - 성장사회에서 성숙사회로 전환 -	김유빈(혁신성장그룹 연구위원)	2022.1.10.
37	장애인 운동 20년, 장애 입법 20년: '이동권'에서 '탈시설'로	이상직(삶의질그룹 부연구위원)	2022.1.24.
38	2021년 「한국인의 행복조사」 주요 결과	허종호(삶의질데이터센터장)	2022.2.7.
39	대한민국의 미래와 교육: 교육아젠다 10선	김현곤(국회미래연구원장)	2022.2.21.
40	타협의 정치와 갈등 관리: 한국 법인세율 결정과정 분석	박현석(거버넌스그룹장)	2022.3.7.
41	코로나19 이후 미국 경제정책 패러다임 전환과 시사점	이선화(거버넌스그룹 연구위원)	2022.3.21.
42	디지털전환 시나리오별 한국 경제사회의 중장기 변화 전망과 시사점	여영준(혁신성장그룹 부연구위원)	2022.4.4.
43	기후변화 5대 영향영역과 적응입법 아젠더	김은아(혁신성장그룹장)	2022.4.18.
44	'국가'와 '국민'을 줄여 써야 할 국회	박상훈(거버넌스그룹 연구위원) 문지혜(거버넌스그룹 연구행정원) 황희정(혁신성장그룹 연구행정원)	2022.5.2.

• 이 자료는 **국회미래연구원 홈페이지**(www.nafi.re.kr) 및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